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지자체 차원의 접근 방향 모색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주배경집단의 구성과 제도적 위상

▶ 이주배경자 개념과 구성

이주배경자는 **자신이나 부모의 이주경험** 관련 특수성 인정
출신배경, 성장배경이 다양한 이들로 구성

<OECD의 이주배경자 분류>



▶ 이주배경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부상

이주배경자의 증가

- ‘이주의 시대’
- 주된 이민자 +이들과 함께/ 따라 이주하는 가족이민자
- 이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민자 부모를 둔 자국태생 지속적 증가

이주배경자의 사회. 경제적 주변화 대물림

- 학업성취, 취업 등 격차
- 인종, 종족 차별문제와 복합적으로 작용
- 심각한 사회갈등 문제화

▶ 국내 정책의 전개

정책의제 형성기

- **이주민 인권문제**의 등장
-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산업재해, 노동조건, 폭력
- 한국인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 그들의 자녀의 국적문제 → 국적법 개정
- 예술행행비자 소지자, 외국인 여성 성폭력, 성매매 문제 쉼터 설치, 통역 서비스

정책성장기

- **외국인정책** 시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 **다문화가족** 개념 형성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 정책추진 기반 발달
- 사업추진기관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자체 관련 조례, 기관**

1990년대

2000년대 전반

2000년대 후반



정책태동기

- **국제결혼**의 증가,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가족갈등문제 가시화
- 부처별 개별사업 추진: 한국어교육, 생활적응지원 등

▶ 이주배경자 세부집단에 대한 관심 형성과 정책의 전개

결혼이민자(가족)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등
관련 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한국어

국내 태생 영유아기
자녀의 성장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0년대초

07년

08년

10년

12년

산업연수생
(94)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04),

방문취업제(07)

미등록 체류 신분
인권침해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학교 입학 상의 장애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지자체) 거주 외국인,
→ 외국인주민

중도입국청소년

레인보우스쿨

다문화학생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이주배경집단의 정책적 위상

다문화가족

한국국적

- 출 생
- 귀 화

외국국적

- 결혼이민자
- 외국국적
자녀

다문화가족 이외

국내출생화교
국내출생자녀

F1,F2,F3
체류자격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등

미등록
체류/
무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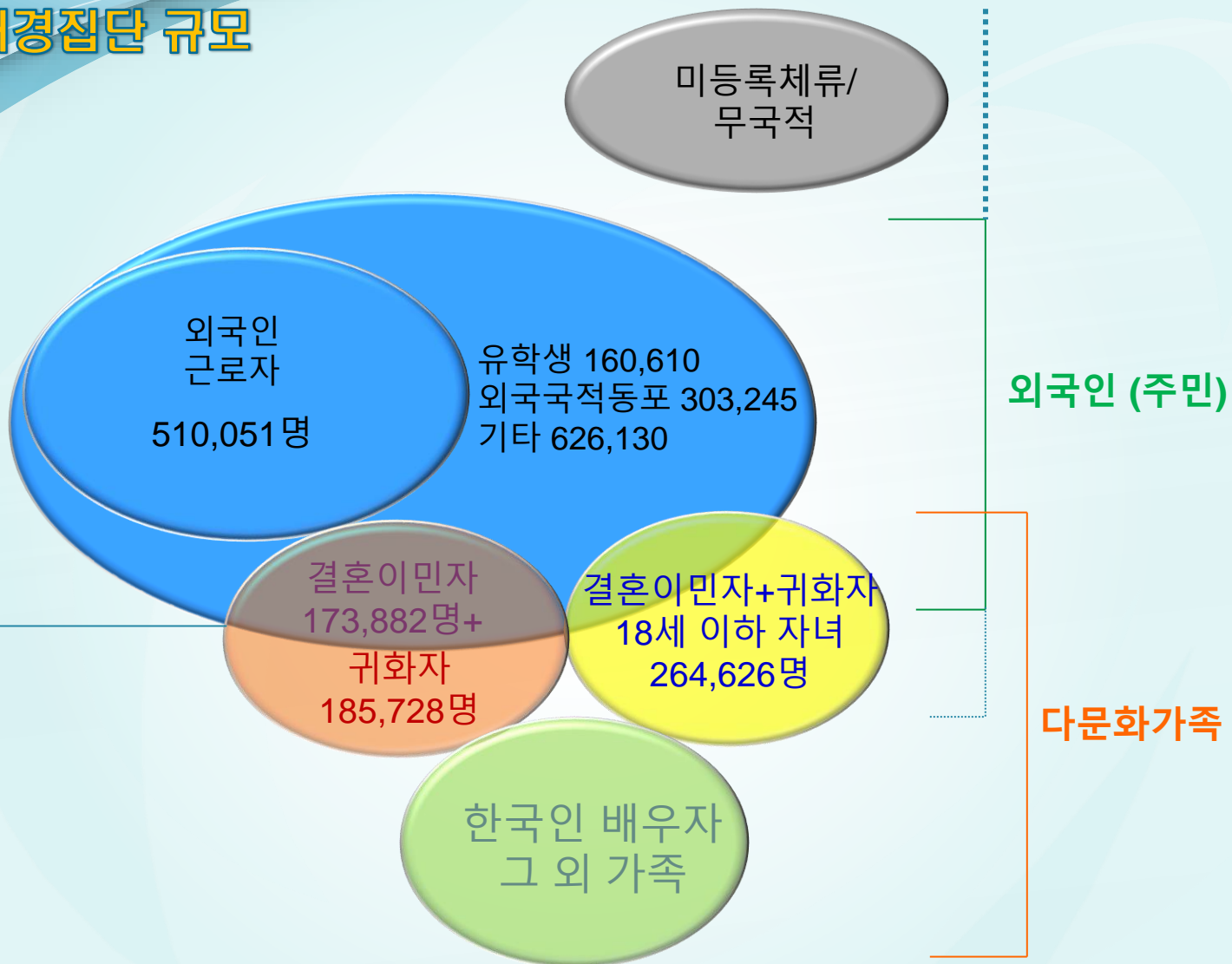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

▶ 이주배경집단 규모

외국인

국민



자료: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자체별 접근 현황

▶ 다문화가족 정책과 외국인주민 정책의 모호한 경계

<경기도 및 31개 기초자치단체 관련 조례 현황>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기초 20)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용인, 이천, 의정부, 평택, 포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지자체: 2007, 2008년 <u>외국인주민(거주외국인)지원조례</u> 제정 --> 2012년 이후 <u>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u>로 개정 여주: 2013년 <u>다문화가족지원조례</u> 제정 --> 2020년 <u>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u>로 개정 안양: 2010년 <u>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지원조례</u>제정--> 2012년 <u>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u>로 개정 12개 지자체: 2012년 이후 <u>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u> 제정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기초1) 화성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주민(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광역, 기초 8) 경기도, 가평, 수원, 양주, 양평, 오산, 의왕, 파주, 하남	
외국인주민(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기초2) 과천, 연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

▶ 지자체 관련 시책의 범위: 수원시 사례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대상	<p>1. 다문화가족</p> <p>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p> <p>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p> <p>2. 결혼이민자 등</p> <p>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p> <p>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p>	<p>1. 거주외국인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서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p> <p>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3.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p> <p>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p>
지원범위	<p>1.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지원</p> <p>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p> <p>3.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p> <p>4.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p> <p>5.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0조의 아동보육·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지원</p> <p>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p> <p>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p>	<p>1.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p> <p>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p> <p>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p> <p>4. 문화·체육행사 개최</p> <p>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지자체 관련 시책의 범위: 부천시 사례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대상	<p><다문화가족></p> <p>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p> <p>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p>	<p><외국인주민></p> <p>부천시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p>
지원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상담과 그에 필요한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와 학습발달·역량개발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10.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응력 배양교육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8. 외국인주민 자조모임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9. 일시적 또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주민의 보호·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지자체 제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우수사례: 7개 특별시, 광역시

다문화가족		그 외 외국인주민 포함
결혼 이민자	<p>취업교육, 찾아가는 취업교육, 멘토링, 온라인 취업 박람회, 구직등록 등 취업상담, 결혼이민자 출산전.후 건강관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서울)</p> <p>결혼이민자대표회의(부산)</p> <p>결혼이민자 관련 학과 운영, 방통대 학비 지원, 비대면 임신.육아교육(대구)</p> <p>결혼이주여성 임신부 교실, 산모도우미 양성, 다문화가족 행복장터 운영(식당, 마켓 & 공방, 체험관)(광주)</p> <p>임.출산 교육 및 양육방법 교육, 한국어교육, 다문화엄마들 모임, 찾아가는 임신.출산.육아체험관 운영 및 현장교육 실시, 임.출산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사례관리, 자녀양육지원(대전)</p> <p>다문화 수출도우미, 결혼이민자 취업연계 및 역량강화사업(울산)</p>	<p>글로벌센터 등 이주민 지원 시설 17개소 운영(한국어교육, 다국어생활상담, 의료지원), 위기 이주여성 전문상담 및 의료서비스 연계, 직장내 이주민 차별 예방 및 대처법 등 인권노동권 교육 실시, 민주시민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인권문화다양성 강사 양성, 외국인주민대표자 회의,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서울타운미팅 개최(서울)</p> <p>외국인주민대표회의, 외국인 방역대응 협의체(체류자격 불문 의료지원, 긴급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선정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포함, 의료통번역 강화, 확진자 동선.반역수칙 등 5개언어로 제공(부산)</p> <p>다문화가족 통역풀 활용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외국인주민 대상 생활체험수기 공모(대구)</p> <p>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시설 연계 원스톱 지원체계(인천)</p> <p>다문화가족 및 고려인 가족 산모도우미 파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운영, 통역 콜서비스 제공(광주)</p> <p>한부모가족, 미등록외국인 등 육아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대전)</p> <p>외국인순찰대활동(울산)</p>
자녀	<p>중도입국 자녀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원, 모국어 교육 지원(서울)</p> <p>방문학습지,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동화책발간, 다문화청소년 성장프로그램, 다문화가정자녀 역사.문화기행(부산)</p> <p>미술프로그램, 멘토-멘티, 동화책 제작(대구)</p> <p>맞춤형 심리.정서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학습 서비스 지원(인천)</p> <p>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광주)</p> <p>초등 입학전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 학습 멘토링(대전)</p> <p>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문화, 정서 지원(울산)</p>	

가족공통, 기타	<p>다문화자녀 및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특강, 이중언어환경 조성 지원, 다문화가족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다문화가족 상담 전문가 양성(서울)</p> <p>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u>소통도우미</u> 파견(대구)</p> <p>다문화가족 공동 후원사업(가족초청, 의료지원사업등)(인천)</p> <p>아빠교실 프로그램,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정서지원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대전)</p> <p>다문화가족 유튜브 채널 운영,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다문화의용소방대 활동(울산)</p>
-------------	--

시민 일반 포함

중국동포·지역주민간 '나란히 걸기' 등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서울)

초등학생 다문화교육, 영유아 다문화이해교육(대구)

대시민 인식개선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월드커뮤니티센터·다문화자료실 '어울림터' 운영(인천)

가족다양성 수용 확산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라디오 송출, 시민참여형 이벤트 개최(광주)

시민·공무원·학생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및 체험활동 추진, 찾아가는 다이음사업 운영, 아시아인 일요 장날 운영, 다문화 작은도서관 운영, 다운지기봉사단 활동,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울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업

자료: 2021 지방자치단체 활동평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개선 노력도 우수사례 中

▶지자체 제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우수사례: 9개 도

다문화가족		그 외 외국인주민 포함
결혼 이민자	<p>횡성군 결혼이주여성 대상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유튜브 다문화방송국<다모여TV> 개국, 속초시 비누꽃 플로리스트,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 <u>자격증반</u> 운영(강원)</p> <p>이주민 원어민 강사를 통한 초등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다문화 관광해설사 운영, <u>취업강화 지역상생 프로그램</u> 운영, 이주여성 강점 강화 기반으로 하는 전문분야 <u>취업 연계</u>, (충북)</p> <p>이주여성 <u>취창업교육</u>, <u>자격증교육</u>, 예산군 글로벌 소통가 양성(충남)</p> <p>결혼이주여성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취업 지원, 다문화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u>다문화 엄마학교</u> 운영(전남)</p> <p>결혼이민자 <u>글로벌 리더 아카데미</u> 운영,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지원(경남)</p> <p>제주 사투리 배우고 노래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노래 영상 제작, 2020년 <u>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u> 다국어판 제작, 2020년 결혼이민여성 온&오프라인 <u>취업박람회</u> 개최, 정보화 교육, 자격 <u>취득반</u> 운영(제주)</p>	<p><u>다문화가족 및 영주권자</u>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u>다문화 유튜브 방송<원곡클래스></u> 운영 (경기)</p> <p><u>다문화이주민* 플러스 센터</u> 설치,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 개소, <u>중도입국청소년 레인보우스쿨</u> 운영, 충북 119 통역봉사단 운영 (충북)</p> <p><u>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u> 인력 및 운영시간 확대, <u>폭력피해 이주여성</u>을 위한 <u>전문상담소</u> 개소(충남)</p> <p>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유치(전북)</p> <p><u>코로나 19 외국인 홈페이지</u> 운영, 외국인 안내문, 마스크, 방역물품 제공(경남)</p> <p><u>1366 센터 가정폭력 이주여성</u> 상담, 통역 지원 운영(제주)</p>
자녀	<p><u>위기다문화가족 자녀돌봄 “우리동네, 빅마마”</u>(경기)</p> <p>택시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강원)</p> <p>진로탐색을 위한 ‘<u>꿈틀</u>’프로젝트, 음악활동 ‘<u>일곱빛깔 악단</u>’, 도서관 탐방 및 독서체험(충남)</p>	
	<p>다문화가족 자녀학습 및 <u>진로지원사업</u>(경북)</p> <p>찾아가는 아동발달서비스 “<u>요망지게 말해요</u>”(제주)</p>	

<p>가족공통, 기타</p>	<p>다문화가족이 함께 즐기는 유튜브 채널 운영, 다문화가족의 이야기 <u>생생 전파</u>(충북) 다문화센터 종사자 <u>추가인건비</u> 지원, 종사자 업무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산 신창분원 개소(충남) 다문화정책·필수생활정보 중심으로 제작한 [사람들] 제작, 배부, 다문화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추진, 코로나로 발생하는 가족문제 분야별 수요자 맞춤형 다문화가족 위기지원 전문 서비스 실시(전북) 다문화가족 SOS 긴급지원팀 운영,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다문화가정 인권보호를 위한 <u>가정폭력예방 다국어 안내서</u> 제작(경북)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남편 <u>서포터즈</u> 운영(경남)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제주문화·역사·언어교육 실시(제주)</p>	
<p>시민 일반 포함</p>		
<p>춘천시 <u>다문화인식교육</u>, 찾아가는 <u>다문화이해교육</u>, 다문화자녀 <u>언어촉진</u> 활동(<u>온라인요리체험</u>, <u>미술활동</u>)(강원) <u>알쏭달쏭 즐거운 과학놀이 교실</u>(충북)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만들기 '신창 그라운드', 청소년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G3프로젝트, 상호문화인식 및 이해 교육, 다문화가족 신문 발행, 다문화가족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범도민 캠페인(충남) (방송프로그램) <u>다문화활력 프로젝트</u>, <u>다정다감</u> 제작 및 방송, <u>외국인주민의 전북생활</u> 조명한 <u>다함께</u> 기획보도(전북)</p>		
<p><u>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u> 추진(전남) <u>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u>(경북) 그림책 발간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사업 '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u>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u> 운영, 제주지역 <u>성인지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u> 개발(제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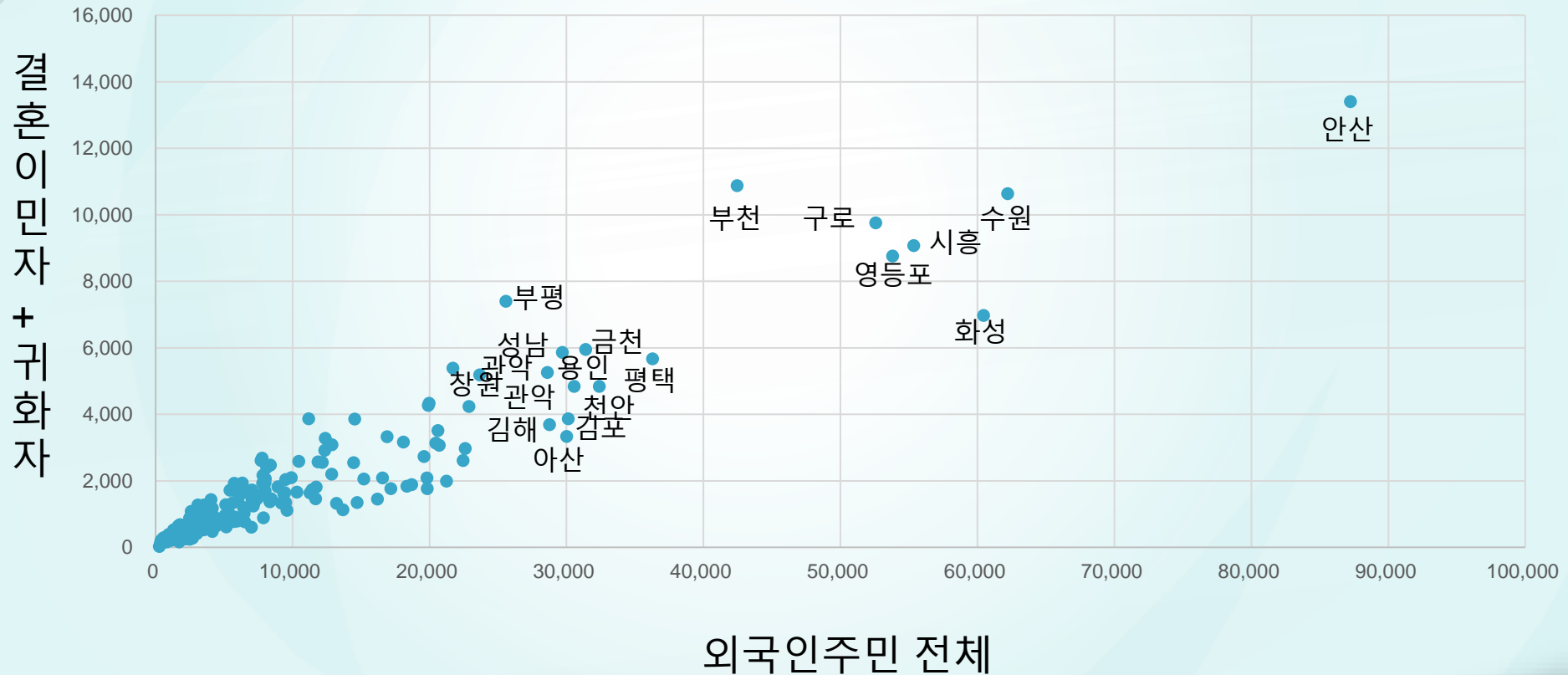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업

자료: 2021 지방자치단체 활동평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개선 노력도 우수사례 中

지자체별 이주배경집단 분포

▶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분포 차이

<기초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귀화자 분포>



자료: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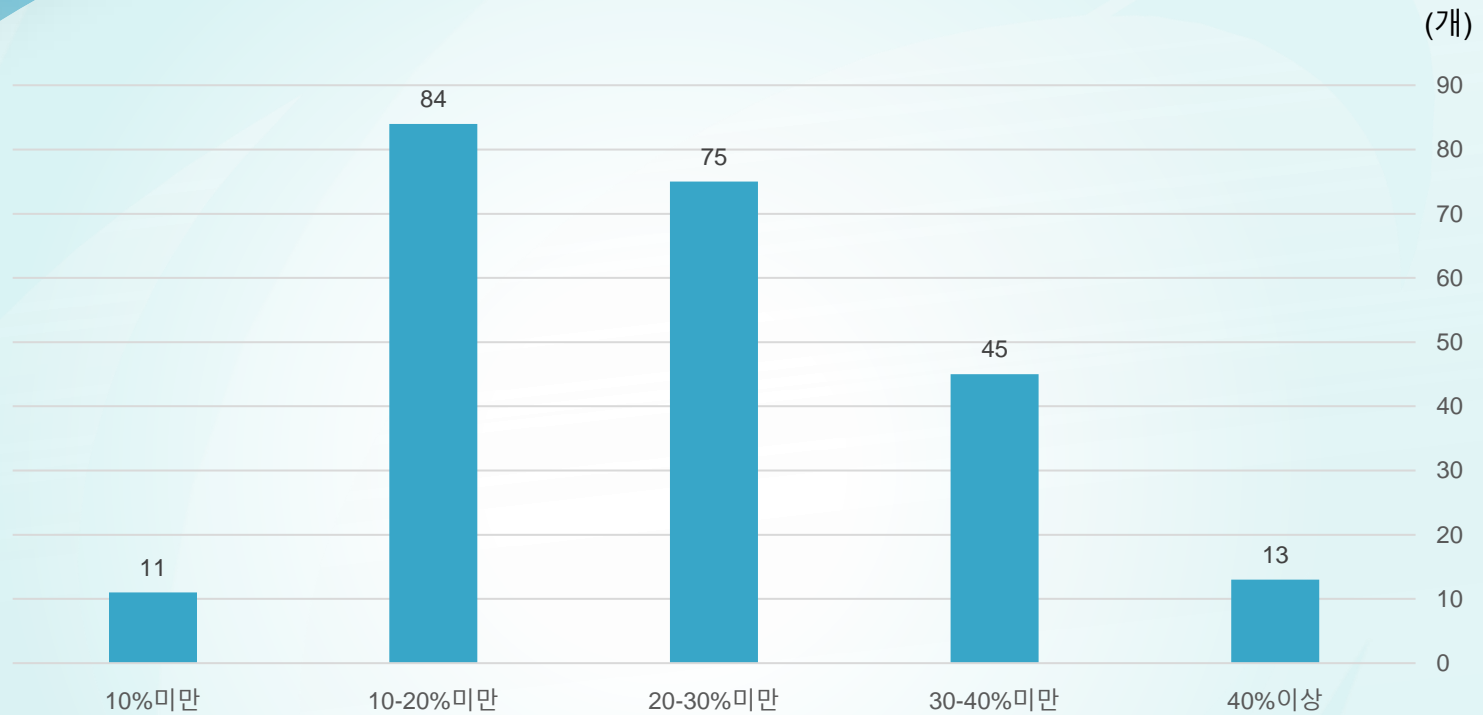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별 기초자치단체 분포 (2019)>

		외국인주민 전체				
		30,000명 이상(13)	20,000명 이상(13)	10,000명 이상(31)	5,000명 이상(49)	5,000명 미만(122)
결혼이민자 · 귀화자	5,000명 이상 (14)	구로, 금천, 영등포, 수 원, 부천, 평택, 안산, 시흥, 화성 (9)	관악, 부평, 성남, 고양, 창원 (5)			
	3,000명 이상 (17)	용인, 김포, 천안, 아산 (4)	광산, 광주, 청주, 김해, 제주 (5)	강서구, 인천남동구, 인 천시, 미추홀구, 안 양, 남양주, 오산, 파주 (8)		
	2,000명 이상 (20)		광진, 동대문 (2)	성동, 성북, 마포, 동작, 송파, 달서, 인천연수 구, 광명, 군포, 천주 (10)	중랑, 은평, 양천, 강 동, 의정부, 포항, 구미, 양산 (8)	
	1,000명 이상 (55)		용산 (1)	종로, 중구, 서대문, 강 남, 을지, 이천, 안성, 경주, 양주, 포천, 음성, 안 경산, 거제 (13)	강북, 노원, 서초, 해 당, 구로, 사하, 달 천, 중구, 성당, 동 대천서구, 유성, 동 산남구, 유산동, 구 춘천, 원주, 충주, 지 문, 서산, 논산, 당 군, 산, 익산, 목포, 서 수, 진주, 서귀포 (29)	도봉, 부산진구, 부 산북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전중구, 대덕구, 울산중구, 울산북구, 하남, 순천, 광양 (12)

[illegible]

자료: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 외국인주민 대비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



다문화가족 비율
낮음



다문화가족 비율
높음

자료: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비율 차이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보다 그 외 외국인주민이 많음

주요 집중거주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은 10-20% 수준. 그 외 외국인 주민이 8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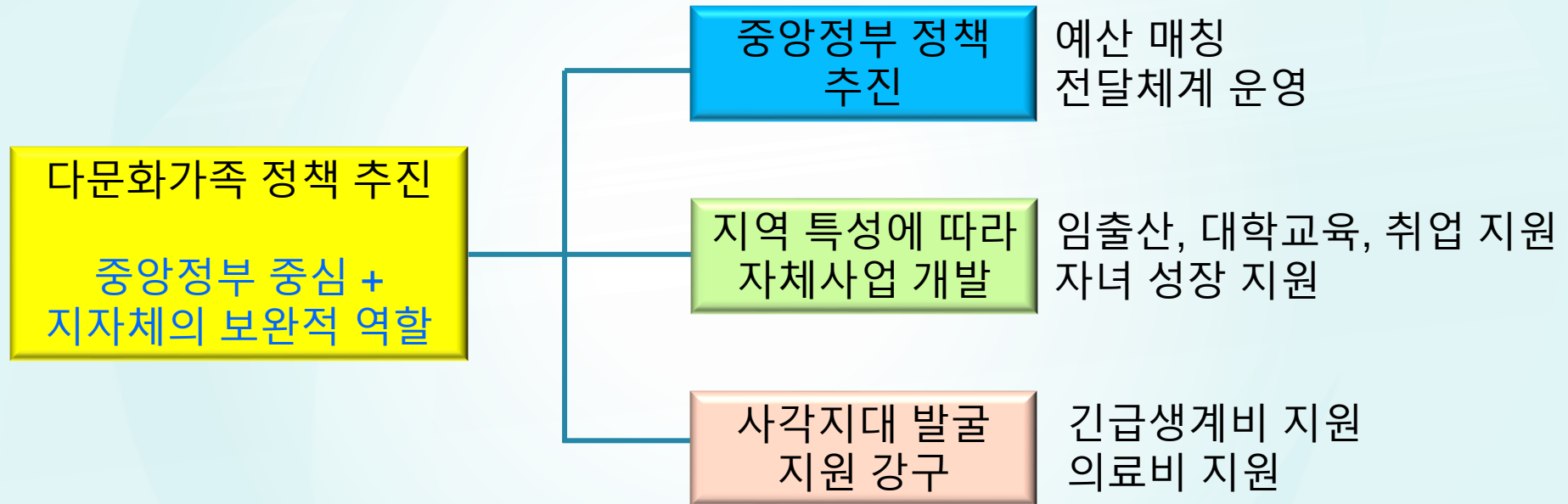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민자, 귀화자 비율별 기초자치단체 분포>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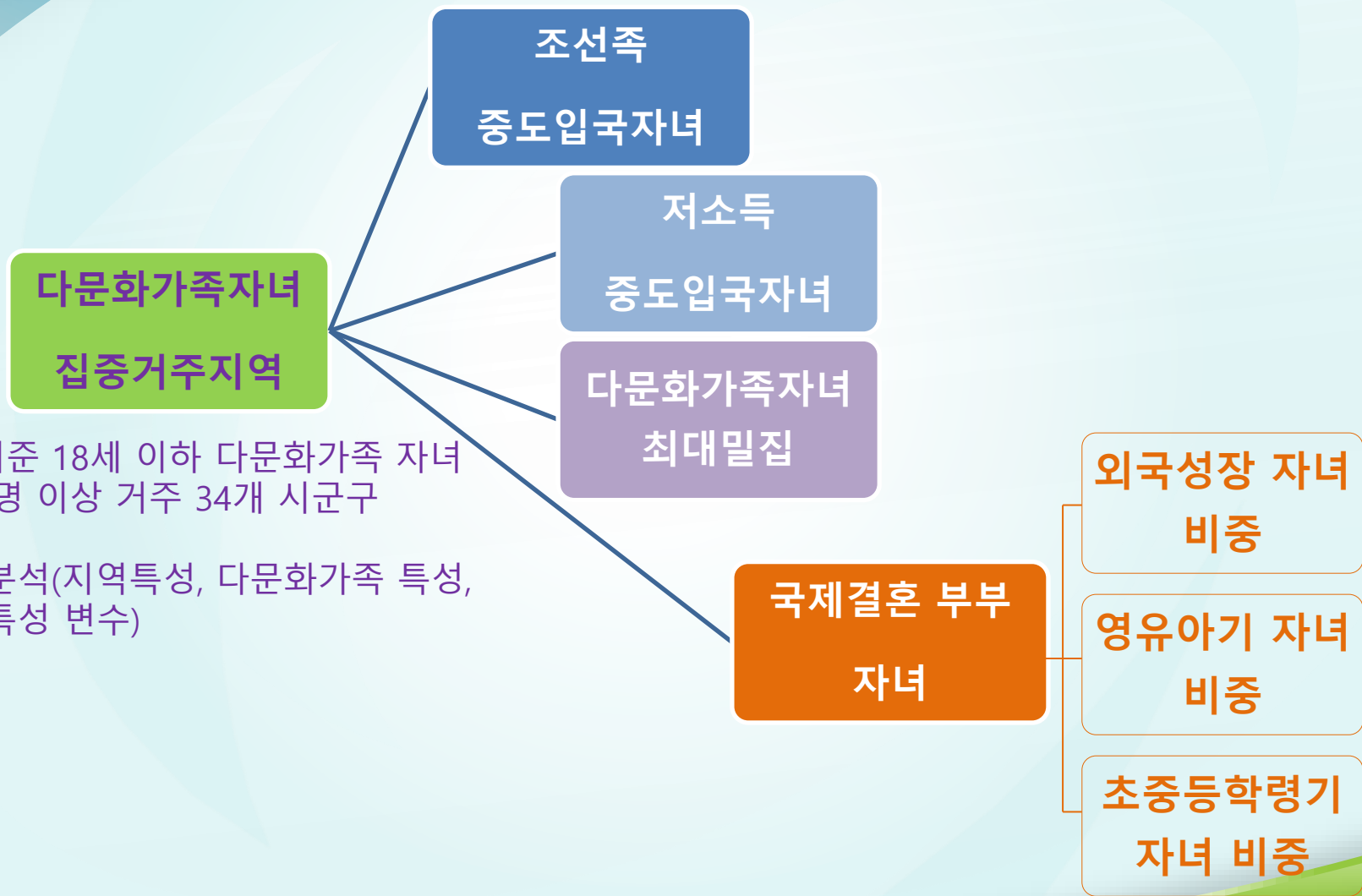
자료: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다문화가족과 지자체 정책

▶ 다문화가족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 자녀 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집중거주지역 유형



'15 기준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1500명 이상 거주 34개 시군구

군집분석(지역특성, 다문화가족 특성,
자녀특성 변수)

조선족 중도입국자녀 중심지역

- 서울 2개 기초자치단체
- 중도입국 자녀 중 한국계 중국 출신(출생시 국적 기준)이 90% 차지할 정도로 **한국계 중국출신** 비중이 매우 높음
- **18세 이상 연령층** 자녀가 54.7%를 차지할 정도로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청소년 자녀의 비중이 높은 특징

저소득 중도입국 자녀 중심 지역

- 서울, 인천 6개 지자체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중도입국 자녀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조선족 중도입국 자녀 중심 지역과 공통점
- 하지만, 중도입국 자녀 중 한국계 중국 출신은 37.7%로 상당히 낮은 수준. 자녀 연령대에 있어서도 조선족 중도입국 자녀 중심 지역만큼 높지는 않음.
-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문제가 자녀 성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다문화가족 자녀 최대밀집 지역

- 경기 3개 지자체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 자체가 월등히 큼
- 다양한 성장배경을 지닌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모두 많다는 점에서 여타의 지역과는 구분되는 특징

국제결혼 부부 자녀 중심 지역

- 그 외 22개 지자체(인천, 대구, 광주,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제주)
- 중도입국 자녀 중심 지역이나 다문화가족 자녀 최대 밀집 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적고 **중도입국 자녀도 적은 편이며 자녀 연령대도 낮은** 특징 공유
- 자녀 **대부분이 출생시 국적이 한국**이라는 점에서도 중도입국 자녀 중심 지역과는 다른 특징
- **국제결혼 부부 자녀 중심 지역 간에도 자녀의 성장 배경, 연령대 분포 차이**
 - (A) 일부 지역은 여타의 국제결혼 중심 지역보다는 중도입국 자녀 규모가 크지만,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 보다는 **외국 거주 경험이 있으나 국내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가 더 많다**는 점에서는 중도입국 자녀 중심 지역과 차이(**국제결혼 부부 중심_외국성장 배경 자녀**)
 - (B) 영유아기 자녀 비중이 비교적 높은 지역(**국제결혼 부부 중심_영유아기 자녀**)
 - (C) 초중등학령기 자녀의 비중이 높은 지역(**국제결혼 부부 중심_초중등학령기 자녀**). 저소득층 비중이 가장 높은 특징도 지니고 있음

▶ 지역 유형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요구와 서비스 기관과의 관계

지역유형		세부 내용
조선족 중도입국 자녀 중심		아버지와의 관계 ↓ 차별.무시 경험 ↑ 비재학, NEET 비율 ↑↑ 한국어교육 수요 ↑ 직업훈련.일자리소개 수요 ↑↑ 서비스 기관 이용 경험 ↓
도시형 저소득 중도입국 자녀 중심		비재학, NEET 비율 ↑ 한국어교육 수요 ↑ 진로상담 · 교육, 직업훈련 수요 ↑
다문화가족 자녀 최대밀집		학교폭력 피해 경험 ↑ 학습지원 수요 ↑
국제결혼 부부 자녀중심	(A)외국성장자녀 비중 높음	일자리 소개 수요 ↑
	(B)영유아기 자녀 비중 높음	상담수요 ↑
	(C)초중등학령기 자녀 비중 높음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 학교공부 어려움 ↑ 학습지원 수요 ↑↑ 진로상담 · 교육 수요 ↑↑ 서비스 기관 이용 경험 ↑

출처: 김이선 외. 2016.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서비스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지역 유형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개발 방향

조선족 중도입국자녀 중심지역

-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는 각종 서비스 기관 이용 경험 자체가 낮은 수준
-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카페 개설

Cyber Outreach 활동을 통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연계

저소득 중도입국 자녀 중심 지역

- 각종 지원에 대한 수요 높은 편
-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 상황 고려한 서비스 개발 필요

맞벌이 가정 자녀의 학습을 위한 특화 서비스 개발
중도입국자녀 학습 지원 다양화

다문화가족 자녀 최대밀집 지역

- 지역 특성 상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증가 폭 클 것으로 예측
다문화가족 자녀 내부의 이질성 역시 증폭 전망
- 성장과정에서의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위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중요
- 지자체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전문 서비스 기관 운영 사례

후기 청소년연령층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체계 구축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자녀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

학교·교육청-이주배경청소년 전문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청소년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간 연계 모델 개발

국제결혼 부부 자녀 중심 지역 (A)외국성장 자녀

- 국제결혼 부부의 외국성장 자녀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이 서비스 기관에서도 인지되지 못함
- 국내성장 자녀도, 중도입국 자녀도 아닌 이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이루어지지 못함

국제결혼 부부의 외국성장 자녀를 위한 가족관계, 학교생활 지원 제공
외국성장 자녀의 특성에 적합한 이중언어교육 실시
(제1언어(베트남어 등)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국제결혼 부부 자녀 중심 지역 (B)영유아기 자녀

-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적합도 비교적 높음
- 기존 사업 내실화 + 영유아기 자녀 성장에 따른 지속적 접근 필요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 교육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교육 지원 강화
가족단위 활동 프로그램 지원 강화
외곽 지역 거주자를 위한 다가가는 서비스(Outreach Program) 지원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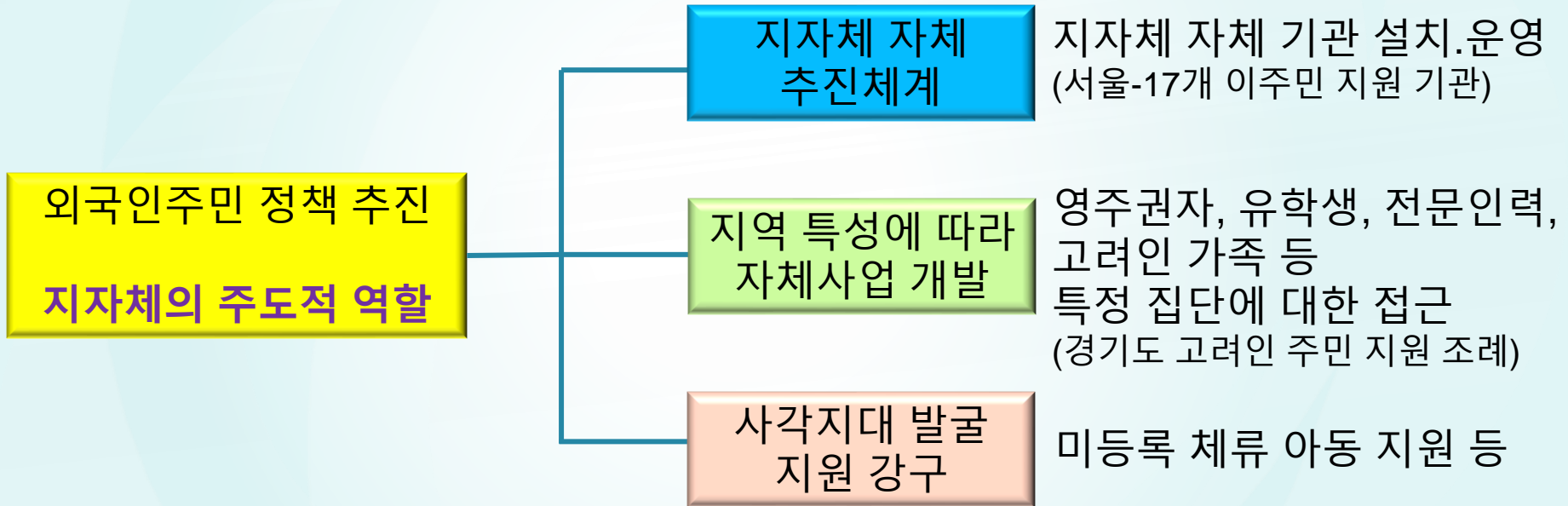
국제결혼 부부 자녀 중심 지역 (C)초중등학령기 자녀

- 2000년대 국제결혼 부부 급증. 최근 신규 국제결혼 정체
- 소수의 중도입국 자녀가 지역적으로 산재

부모 대상 자녀교육과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강화
다문화 및 청소년 관련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 중도입국 자녀의 초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주민과 지자체 정책

▶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자체 운영 기관 사례

외국인주민 일반

-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7개)
-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수원시 외국인인권복지센터
-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지원센터
-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

이주배경 청소년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 외국인주민 세부 집단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지원 대상

체류자격의 중요성 vs.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자율적 결정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 범위(2015)>

지원 대상 범위		자치단체 수	비고
미등록 체류자 제외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 제외	광역시 10개 기초 158개	
일부 지원은 미등록 체류자도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재해, 질병 등으로 긴급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광역시 3개 기초 52개	
체류자격과 무관	해당 조례에 지원 대상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항 없는 경우	광역시 2 기초 3	서울, 부산 울산 북구, 익산, 목포

자료: 김이선 외. 2015.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단, 비고의 내용은 2021년 재확인

▶ 외국인주민 세부 집단과 지방자치단체

거주지역 (생계활동) + 체류자격 유무 + 체류자격 종류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세부집단에 대해 '특별한' 접근

ex. 부천: 전문인력, 전주: 유학생, 하동: 재외동포(영주권자)

영주 재외동포 전문인력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 미등록 체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지자체


지방선거권
(공직선거법
15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준하는 각종
지원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13조)

국어, 제도.문화교육,
자녀보육.교육 지원,
의료지원 등 적응 지원

유엔아동권리
협약

▶영주권자에 대한 다소 '특별한' 처우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

-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등 서울시 산하 4개 기술원
- 만 15세 이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된 자 외에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된 자로 영주권을 획득한 자를 교육대상으로 명시

김이선 외. 2015.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결혼이민자+영주권자

-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례 확인된 경기도 내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20개 기초자치단체: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지급

▶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통해 본 지원 대상 확대 경향

코로나 사태에서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인하는 계기
외국인주민 포함 여부, 범위에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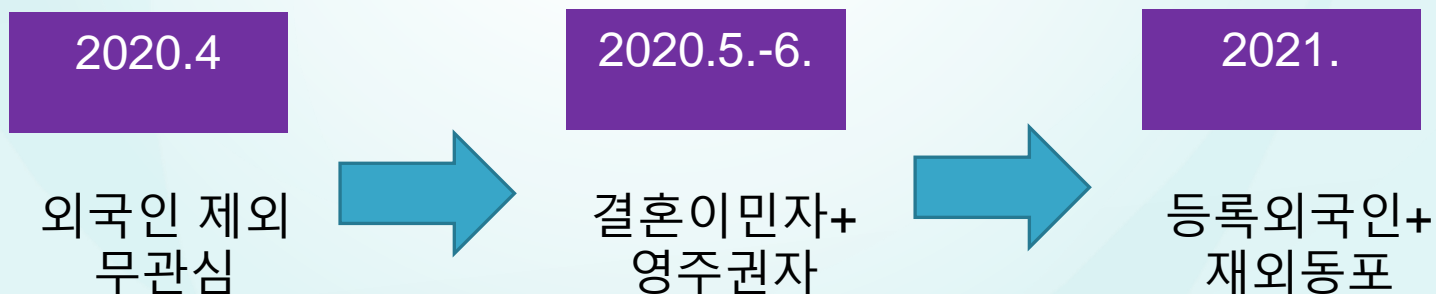
2020-2021 지급 대상 확대 경향

경기도 및 25개 기초자치단체 (6개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례 미확인)

대상규정 명시되지 않음: 1개 기초자치단체

결혼이민자+영주권자: 20개 기초자치단체

등록외국인+재외동포: 경기도 + 4개 기초자치단체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지방자치단체

일부 지자체는 지원대상 요건에 체류자격, 등록 요건 포함하지 않음.
또는 체류자격 요건을 포함하더라도 긴급 구조 등에 있어서는 예외 인정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 서비스 기관

경기도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2011),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2011)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2009),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2020),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2009),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2009),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 사례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례

- 영등포구: 외국인의 건강보호, 질환 관리를 위해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등과 함께 외국인 토요 무료진료, 연2회 외국인 건강검진, 외국인 1:1멘토, 산모신생아도우미 연 200명 양성, 외국인대상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 안산시: 외국인 일반진료, 한방, 치과진료 받을 경우 신분 확인 시 진료비 감면, 휴일 무료 진료, 감염병 검진 사업 실시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25개 자치구보건소 통해 건강검진, 전염병관리, 임산부서비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 건강서비스 제공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례

- **보육시설,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자녀 3명 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에 120만원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전담 어린이집에는 시설당 3인의 교사 인건비 지원. 일반아동과 통합 보육 어린이집에는 외국인근로자자녀 3명 이상일 경우 교사1인 인건비 지원
- 서울시: 다문화어린이집 지정.운영. 다문화아동에 다문화가족 자녀 이외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 교육 기자재비, 아동 및 부모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비담임교사 지원. 서울시와 자치구 50%분담

김이선 외. 2015.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는 ...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운영지원에 나선다.

○ 보육료를 지원받는 국적 아동과는 달리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는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 영등포나 구로 등 외국인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재원 아동의 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외국인 아동 미등원으로 인한 보육료 손실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1,11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평균 1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재원 아동수에 따라 영아 20만원, 유아 38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2020.4.20.)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130442?tr_code=snews 2020.6.14. 검색)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수, 구성 차이

지자체 특성 반영한 정책의 중요성

다문화가족 정책과 외국인주민 정책의 경계 모호

중앙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과 외국인 주민 정책 구분
그러나, 지자체의 상황은 전혀 다름

- 조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례’에 다문화가족 이외 이민자 지원 사업 다수 포함
-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움직임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이외 이민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

다문화가족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중앙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하거나 보완하는데 초점. 지자체 독자적인 접근 제한

지역별 다문화가족의 세부 특성에 따른 서비스 보완이 과제

외국인주민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정책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적 접근 폭 넓음
지원 대상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규정. 지자체별 차이도 큼
서비스 기관 설치,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
관련 사업도 지자체별로 개발, 시행

지원 대상 등 지자체 특성에 초점을 둔 자체사업 활성화 필요